Special Feature

2008년 미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지민웅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현재 미국 사회는 겨울을 실감하지 못할 만큼 두 가지 이슈로 뜨겁다. 올 연말에 있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과연 최초의 여성 대통령 혹은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동시에 부시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관료들과 당파를 초월한 정계 인사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까지 미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의 매스미디어들은 "2008년은 잊고 싶은 한 해가 될 것이다", "2008년의 미국 경제 이미 불황은 시작됐다. 문제는 얼마나 악화될 것인가?" 등의 자극적인 기사들을 연일 울려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지난 2년간 미국 경제의 급추락을 경고하는 전망이 연초에 늘 대두되기는 했지만, 올해처럼 비관적인 전망만이 난무했던 적은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작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지만 명쾌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노사관계 및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이슈들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미 불어닥친 불황 속에서 경제 주체로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에 따라 해고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대부분 사람들의 회자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재화와 서비스의 유발 수요(derived demand)임을 감안하면, 2008년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 역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의 미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노동시장 지표, 특히 고용지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작년 12월의 고용지표 발표 전만 해도, 미국 경제에 대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비관적인 전망만 득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7년 초의 전망과는 달리 작년 여름 내내 미국 경제는 지난 4년간 찾아볼 수 없었던 유례없는 성장을 낳았다. 일례로 3/4분기에 주요 경기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내총생산의 성장률과 소비지출성장률은 각각 4.5%와 2.8%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4/4분기에 경기는 급격히 추락하여 국내총생산성장률은 1.5%, 소비지출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때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택시장의 침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미국 경제의 경착륙을 일제히 경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4/4분기의 경기침체를 단지 주택시장의 슬럼프와 신용 경색이 '낳은' 일시적인 소비 위축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하면서 미국 경제가 불황에 들어섰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이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애써 축소 해석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주요 경제지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지표, 특히 고용지표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용은 미국 경제성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의 출발점으로 미국 경제의 현주소를 가장 잘 대변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와 신용경색으로 위축될 대로 위축된 소비심리 및 생산활동이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 부시행정부를 비롯한 낙관론자들은 주목했던 것이다. 즉 이들은 악화되지 않은 고용지표를 근거로, 여러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근본(fundamental)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이 일시적인 후퇴기를 슬기롭게 보내고 나면 다시금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 1월 초 미국 노동부가 작년 12월의 고용지표를 발표하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조심스러운 낙관론마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12월의 실업률인 5%는 뉴얼리언즈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급증했던 2005년 11월의 실업률 이래 최고인 수치였다. 또한 1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은 11월에 비해 약 10여만 개 줄어든 것이자 많은 경제단체

들이 예상했던 9만 4,000여 개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로서, 근 4년간의 어떤 달(月)도 이보다 적은 일자리 증가를 보인 적은 없었다. 적지만 그래도 양(+)의 수를 기록했던 12월 일자리 증가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더욱 참담하다. 정부직과 의료 및 음식서비스 부문에서만 일자리 증가가 있었을 뿐, 그 외 모든 부문–심지어 소매업에서조차–에서 일자리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1] 특히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약 1만 7,000여 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4분기 주요 경제지표의 악화와 더불어 대폭 하락한 12월의 고용지표를 두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불황 국면에 이미 들어섰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평하면서, 최대 성수기인 연말쇼핑 시즌이 포함된 4분기의 국내총생산, 소비성장률, 일자리 증가수, 그리고 실업률이 최악이었는데 2008년이라고 이러한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겠느냐며 더욱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2008년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 대한 이러한 암울한 전망이 1월 현재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2월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2], 미국의 1월 비농업부문 일자리수는 1만 7,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부문의 고용이 줄어든 것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1월에 7만여 명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던 당초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든 것이자, 지난 2003년 8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실업률은 작년 12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작년 12월의 실업률이 근 4년간 최고였음을 감안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노동시장의 문제가 1월에 들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또 다른 지표라고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주택시장의 침체와 신용경색 등의 악영향을 상쇄하며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노동시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낙관론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진 것이다.

1) 2007년 12월에 정부직과 의료 및 음식서비스업에서는 총 5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소매업에서는 2만 4,000개, 금융서비스업에서는 7,000개, 그리고 건축업에서는 4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 http://www.bls.gov/news.release/pdf/empsit.pdf.

긴급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의 실시 : 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이렇게 명약관화해진 불황 국면에서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을 서둘러 벗어나게 하고자 부시행정부와 하원은 합동으로 1월 24일 긴급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비록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 이 부양책보다 더 광범위한 것을 요구하면서 법안 통과가 다소 지연되는 듯했으나 지난 2월 7일 노동관계법을 포함한 기타 법안 처리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부시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규모보다 약 50억 달러 더 많은 1,520억 달러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상원이 승인하면서 그와 관련된 모든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월 중순부터 자녀가 2명인 4인 가정의 경우 최대 1,800달러까지, 고령자 및 장애 퇴역병으로 대표되는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연 소득이 3,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의 개인은 1인당 최대 300달러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긴급경기부양책을 두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빨리 처리되어 경제에 긴급 수혈할 수 있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그것이 경제 및 노동시장의 국면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가장 극단적인 반응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집을 잃을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돈 몇 푼씩 나눠 주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비록 이 정도의 비관적인 논리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해도, 이번 경기부양책을 통해 하위 소득 40% 계층(people with incomes in the bottom 40 percent)에게 지급하게 될 세금 환급액의 비율이 전체 환급액의 10%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한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분석을 감안하면[3],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세금 환급으로 고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가 더욱 크게 진작될 것임은 당연지사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실제 통과된 긴급부양책은 그 정책 대상(target)을 완전히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번 법안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부양책이 현재 노동시장 악화의 주범을 치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업률의 유례없는 증가와 일자리수의 예상치 못한 감소보다 더욱 전문

3) http://www.epi.org/content.cfm/newsflash_080123_missed_target.

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엄청난 수의 장기실업자와 그것의 지속되는 증가 추세이다. 작년 12월,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1,300만 명으로 2007년 전체 평균에 비해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더욱 크게 증가하여 1월의 경우, 실업상태에 머무는 기간을 지난 12월에 비해 평균 5.4%나 연장시켰다. 이러한 장기실업자의 규모와 증가 추세는 그 주된 원인이 일시적인 경기후퇴가 아니라 노동력의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음을 알려준다. 쉬운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이들 장기실업의 문제가 경제학자들을 현재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장기실업자의 현재 규모가 마지막 불황이었던 2000년 직전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4] 일반적으로 장기실업자는 단기실업자에 비해 소비지출 및 저축의 행태 등을 구조적으로 크게 줄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규모의 확대는 경기 침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욱이 이들은 장기실업에서 벗어나고자 낮은 임금의 직장에도 선뜻 취직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고용지표는 개선될지 몰라도 소비지출의 지속적인 감소 및 소득 양극화의 확대라는 또 다른 경제 문제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실업이 경제의 불황상태를 영속화시킬 수 있는 이상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한, 최근의 불황 때보다 더 크고 빠른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수와 그러한 메커니즘 어느 구석에도 해결책으로 작동할 수 없는 현실의 경기부양책을 보면서 근심하고 있지 않을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장기실업자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실업보조금 지급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부양책에 추가하자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제안을 선거전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그 뜻을 결국 물리친 부시행정부와 공화당의 정책과 연관된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말이다.[5]

■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의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동시에 급격히 침체되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전통적인 노사관계에서는 파업과 같은 노사 간의 마찰과 노동조합이 자신

4) 가장 최근의 불황이 시작되었던 2000년에 전체 실업자수 가운데 장기실업자수의 비율은 11.4%였던 반면, 2007년에는 17.6%로 크게 증가하였다.
5) 이를 보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부시행정부는 현재의 미국 경기의 침체와 노동시장의 약화를 여전히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의 권리를 다소 포기하는 양보교섭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실용주의(Business Unionism)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특유의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될 수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노사관계는 철저하게 자본과 노동의 타협에 기반을 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에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각종 교섭과 파업 및 직장폐쇄 등-는 쌍방 모두가 인정한 규칙, 즉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으로 대표되는 노동협약(labor accord) 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 속에서 고용주는 노조가 설립되면 이를 인정하고 선의를 가지고 충실하게 협상해야 하며 그 속에서 도출된 단체협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고용주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경영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기업전략, 투자전략, 인사관리전략, 기술전략 등에 관한 의사결정 - 을 고용주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 이에 간섭하지 않고 오로지 임금, 노동시간, 고용조건 등만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사관계의 메커니즘이, 경기가 호황 국면에 들어 있거나 회사의 경영조건이 좋을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데 있다. 미국의 실리적 노동조합주의에서 노동조합은 자신의 합법성을 인정받는 대신 노동력 편성의 전권이 자본측에 있음을 승인하고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한다. 그 대신 단체교섭을 통해 생산성 향상만큼의 임금상승을 이끌어낸다. 이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후 노동자들의 소비지출의 확대 → 기업의 매출 및 이윤 증대 → 고투자 및 고생산성 → 고임금으로 이어지는 '호순환'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되어, 미국 특유의 실용주의적 노사관계가 큰 문제없이 안정적인 체제로 자리잡는 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호순환 메커니즘의 어느 한 고리에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경기 침체나 회사 경영조건의 악화로 경영자가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더 이상 그들에게 협력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파업과 같은 노사 간의 마찰이 상대적으로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단체행동이라는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통해서도 노동조합이 고용주의 양보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단체협약 내에는 통상 파업금지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고, 상급노조는 하급노조나 일반 노조원이 교섭 내용에 불만을 품고 불법파업(wild-cat strike)을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동력 편성을 비롯하여 회사의 공장이전, 신규고용 문제 등, 회사의 전략적인 결정을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오로지 임금, 노동시간, 고용조건에 대해서만 협상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운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할 수

있는 협상용 카드가 한정되어 결국에는 고용주에게 양보교섭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 노사관계의 전형이라고 불리는 미국 자동차3사의 최근 2년간의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 속에서, 회사의 좋지 않은 경영조건이 적지 않은 노사 간의 마찰과 노동조합의 양보교섭을 지속적으로 양산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6] 2006년 GM과 포드는 다소 이례적인 단체협약을 새로이 맺었다. 기존의 단체협약이 2007년 9월에 만기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계약을 갱신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었던 것이다. 새로운 단체협약을 만드는 협상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두 가지, 회사의 의료보험비 절감과 고용 규모의 축소였는데 노조는 다음해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를 대폭 포기하는 양보교섭을 수용했다. 하지만 그러한 2006년의 양보교섭에도 불구하고 2007년 3/4분기에 체결된 GM과 크라이슬러의 단체협약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록 2006년의 단체협약의 내용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협상테이블의 가장 큰 이슈였던 회사의 의료보험비 및 고용축소 요구에 대해 2007년에도 노조가 여전히 양보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고자 GM노동자들이 37년 만에, 크라이슬러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파업을 단행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이미 타결된 GM과 크라이슬러의 단체협약안에 기초하여 쉽게 타결되리라고 예상했던 포드의 단체협상은 해를 넘겨 2월 들어서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점은 노사 갈등의 지속과 양보교섭의 체결로 대표되는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 단체교섭의 일련의 과정들이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회사 경영조건의 악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반추할 때, 올 해의 전통적인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제 및 노동시장의 현재 조건 탓에 노동조합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6) 미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단체교섭의 과정 및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하라. 김성훈, 「최근 미국자동차산업의 단체협약」, 『국제노동브리프』, Vol.5, No.2, 한국노동연구원, 2007년 2월, pp.104-109 ; 김성훈, 「미국자동차산업 UAW-GM 단체교섭」, 『국제노동브리프』, Vol.5,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07년 11월, pp.56-62.

전통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난 형태의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한 조직의 성장은 지속될 것

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프리랜서들이 전통적인 노동조합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불이익을 해결하는 최근의 사례[7]들은 해를 넘어서도 주춤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프리랜서들이 스스로 형성하여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은 기존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사실상 산별노조의 역할을 하는 형태에서부터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교모임에 가까운 형태까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매스미디어에 주목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프리랜서 조직들은 전통적인 노동조합과는 달리 단체협약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상호 정보교류 및 의료보험 공동구매 등의 복지혜택에 치중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조직이 공통으로 주목하고 있는 관심사는 공동구매를 통한 의료보험비의 대폭적인 절감인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솟고 있는 의료보험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업무 이외의 복리후생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랜서 계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저렴하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가의 의료보험의 제공은 무료 혹은 저가의 조직 가입비와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구미를 자극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프리랜서 조직들의 양적인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 내의 프리랜서 개인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정부 정책상 불이익을 받을 때 이들 조직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 체계에서 기존 노동조합의 모습을 일정 정도 담은 형태로의 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시 말해, 효과적인 협상을 통해 프리랜서들의 공통된 요구를 분명히 관철시키기거나 정부 정책 및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혹은 고용주 단체가 현재의 조직을 전통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고, 이후 더욱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쉽게 수렴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7) 미국 프리랜서들이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직과 그 활동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라. 김성훈, 「미국의 프리랜서 노동조합」, 『국제노동브리프』, Vol.5, No.12, 한국노동연구원, 2007년 12월, pp.43-50.

조직 내의 프리랜서 개개인들의 이해관계의 융합 및 조정 문제이다. 앞으로의 프리랜서 조직이 현재와 같은 공동구매의 성격이 짙은 단체로 남게 될지, 혹은 고용주는 물론 사회 전체에 그들의 목소리를 통일하여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노동조합 본래의 성격에 더욱 가까운 조직으로 발전할지는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진지한 고민과 대응이 현재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조직이 질적인 발전으로 전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본문에서 2008년의 노동시장과 전통적인 노사관계는 노동자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이 무색해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미 언급했지만 올해 말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그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돈'이 많이 풀려 경기 및 노동시장이 회복될지도 모르고, 미국의 전통적인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유력해지는 경우 여러 정치적인 경로를 통해 노사관계가 크게 요동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조금은 뜬금없는 이러한 비논리적인 바람이 설령 부시대통령을 위시한 낙관론자들의 그것과 비슷할지언정 미국 경제 주체의 모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길 기원해 본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많은 이민자들과 회사의 방해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올 한 해도 힘들게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의회를 통과하여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민개혁법안(Immigration Reform)과 근로자 자유선택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이 여전히 의회에서 표류중이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과 관련한 양당 간의 정치적인 의견차를 고려컨대 대통령 선거전까지 어느 쪽에서도 이들 법안의 통과 혹은 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2008년은 그 누구보다 불법이민자들과 노동조합을 보다 쉽게 조직하고 싶은 노동자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암울한 한 해 그리고 인생에서 제일 지우고 싶은 한 해로 출발하고 있다. KLI